



농림부와 함께 최대 인맥 형성



<8>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글자 그대로 건설과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건설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는 1948년 11월 14일 내무부 소속의 건설국으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교통부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조직의 하나로 설치됐다가 지난 1994년 12월 건설부와 교통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탄생했다.

건설교통부는 몸집이 큰 만큼 건교부 내의 인맥도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연 등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타 부처에 비해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영남정권 시절의 건설부와 교통부는 농림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과 함께 호남 인맥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됐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복 출신의 약진이 돋보였다. 실제로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 중반(1995년 12월)까지 13명의 건설부장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5명으로 나타났다. 전남 출신인 김종호 장관과 전북 출신의 최동섭, 박승, 허재영, 고병우 장관 등이 다. 영남 출신도 6명(이규호, 권영각, 이상희, 이진설, 서영택, 김우석)으로 집계됐으며 강원 출신은 2명(김주남, 김성배)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교통부 장관 13명 가

운데 호남 인맥은 4명으로 전남 출신의 손수익, 김창식, 임인택 장관과 전북 출신의 정재석 장관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교통부와 건설부 장관의 출신지만을 비교하면 영남과 호남이 각각 9명씩으로 균형을 유지했으며, 영남 정권 아래서 농림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호남 출신이 수장을 맡았던 부처로 분석됐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문민정부 중반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10명의 장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2명

으로 전남 출신의 안정남, 임인택 장관 등이다. 한편,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건설부와 교통부, 건설교통부 차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명의 차관 가운데 영남 출신이 7명, 충청 출신이 7명, 서울·경기 출신이 4명, 강원과 이북 출신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임명된 6명의 차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전남 출신의 조우현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공~문민정부 중반까지 장관 5명 배출 차관급은 소외...현 3급 이상 44명중 10명

강원 출신이 2명, 영남 출신 2명, 이북 출신 1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들어서 임명된 4명의 건설교통부 장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2명으로 전북 출신의 강동석 전 장관과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 출신의 이용섭씨다. 영남 출신은 1명(추병직)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출신도 1명(최종찬)으로 집계됐다.

차관 4명 가운데 호남 인맥은 전북 출신의 김용덕, 이춘희 등 2명으로 집계됐으며 영남 출신 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건설교통부 내의 호남 인맥은 타 부처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않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약화됐다는 평가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급 이상 44명의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호남 출신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이용섭 장관(합평)을 필두로 서중재 주거복지본부장(여천), 손명진 비상계획관(광주), 정병용 혁신정책조정관(강진), 임영상 장관보좌관(강진) 등 5명으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개성공단과 '피주기' 논란



정후식
정치부 차장

개성공단에는 활기가 넘쳤다. 가동 중인 공장들은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로 넘쳐났다. 그 중 5천여명은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500여명 가량은 철야 근무를 한다고 했다. 추가 수당 덕분에 자원자도 많다. 남측에서도 매일 600여명이 오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2차 분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북측 근로자들 가슴에 빛나는 김일성 배지를 제외하면 남쪽의 여느 산업단지과 다를 바 없었다.

북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엄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외였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설 때까지만 해도 우려가 더 컸다. 남측에선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공단 존폐문제까지 거론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데도 그곳에선 별다른 동요 없이 공장이 가동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만난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현대아산,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개성공단까지 대북 '피주기'로 몰아가는 일각의 분위기였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접근에 대한 바람도 컸다.

그들의 얘기는 이렇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임금 및 물가 현실화 등 상당부분 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뒤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했다. 개성에 있던 핵심 군사기지까지 후방으로 뺐다. 생존을 위해 경제개혁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남한 역시 외국으로 기업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대안 생산기지로 선택했다. 인건비와 물류 여건도 최상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이 변수이긴 하지만 한·미·FTA에서 합의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받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무관세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결국 개성공단은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 경험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은 토지이용료 1천200만달러, 임금 1천만달러 정도로 이는 어느 지역에서도나 공장을 운영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돈"이라며 '피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개성공단이나 남북철도연결에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체제 유지가 급선무인 북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기지 차원에서 내실있게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화합,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who@kwangju.co.kr

재협상 "NO" 추가협상 "YES"

한미 FTA 추가 협상 임박...정부, 환경·노동 한정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임박하면서 협상의 형식과 양측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美 금주 재협상 요구 전방=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점이 이번 주인 6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는 6월까지의 일정으로 한미 FTA 협정문을 둘러싼 양국의 법률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률 검토 마무리와 함께 이번 주 중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요구, 환경·노동에만 한정될 지는 불확실=정부는 그간 추가협상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에 노동·환경분야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 부분에 협상이 한정되리라는 기대감을 표시해왔다.

정부의 희망대로라면 표현 자체가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이 타당성을 갖는

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자체가 TPA의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노동·환경분야의 부속서를 추가하는 형태만의 협상을 요구할 지는 불확실하다.

농업분야에서도 미국측 FTA 평가위원회는 최고기 시장 완전개방 요구는 물론 쌀의 양허대상 제외와 오렌지 시장개방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 재협상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태다.

◇우리나라 전문직 비자유화 등으로 대응=우리측은 추가협상이 이뤄지면 미국에 전문직 비자유화,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에 대한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대표도 최근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에 대응해 받아낼 요구 조건과 관련해 전문직 비자유화,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을 "한편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홍보처 폐지·언론법 개정 '태풍의 눈'

6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

정치관계법·사학법도 공방

4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는 쟁점 법안 및 현안들이 많아 각당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가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핵심쟁점 법안으로 대두돼 있고, 대선을 앞두고 '개임의 톨'을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처 폐지·언론관계법 재개정=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도 '언론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이번 국회에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당은 언론관계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홍보처



손잡은 한·중 외교장관 3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두번째 회의를 가진 한국의 송민순 외교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4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3대 현안법안의 처리는 6월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 청문회=이달말 공식 협정문 서명을 앞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청문회는 정당간 대립이 아닌,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치 전선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U-Together

2007

장애인의 디지털 세상

정보통신 보조기기로 눈과 귀가 되어드립니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 ▶ **보급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 **보급기기**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12개품목 44개 제품)
-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 **신청기간** 2007년 6월 1일(금)~7월 10일(화)

- ▶ **신청방법** 신청서류 1부를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접수
신청양식 다운로드 www.npost.go.kr (전남체신청)
www.kado.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 **기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방법 및 절차, 제품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상담 및 접수안내** 전남체신청 062-600-4823(상담) / 062-600-4815(접수)

www.npost.go.kr

www.kado.or.kr